

# “폭력 대물림 근절 위해 징계 제도 개선 필요”

### 주상현 조선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 인터뷰 “폭행 지도교수 피해자 1명 추가 확인 중” “경력 피해 우려까지... 학습된 무기력 팽배”

“비단 우리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외국 내 폭행 사건은 반복될 것입니다.”

주상현 조선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응급의학과 과 3년차)은 병원에서 지도교수가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난 지 6일째 되는 26일 외국 내 폭력의 대물림을 우려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도교수와 전공의라는 갑을관계와 좁은 의사 사회에서 비롯된 전공의 문제는 공론화가 어렵다”며 제도 개선과 충분한 전공의 보호, 당사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벌을 촉구했다.

주 협의회장은 지난 20일 교내 전공의 A씨의 폭로 이후 전공의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병원 내 폭력고충신고센터를 통해 전공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가 하면 이를 통한 구제 절차의 문제점을 짚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A씨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B 지도교수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가 1명 더 있다는 내용을 파악,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B 교수가 식당에서 같은과 저년차 전공의에게 “한 가하게 밥먹을 시간이 있느냐”며 나무라며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이다.

주 협의회장은 이로 말미암아 해당 교수를 거처간 전공의들 대부분이 비슷한 피해 사례를 겪은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소통이 없는 각 과 사정과 전공의가 처한 지도교수와와 갑을관계 등으로 인해 피해 내용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8월 선출된 주 협의회장은 A씨의 사례를 폭로를 통해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외국이 닫힌 사회처럼 운영되는 상황에 전공의를 넘나드는 속사정을 일일이 알아차리기 어렵다.

전공의 차원의 공론화가 지도교수의 보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외국에 팽배하다.

지도교수의 재량 아래 수술·수련 배제 등 은밀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고 의사고시 합격 이후 다른 병원에 취업하게 되더라도 좁은 의사 사회에서 관련 소문이 파다해져 제대로 된 처우를 받을 수 없을 것 이란 우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공의 사회에서는 학습된 무기력감마저 들고 있다. 통제할 수 없는 피해 혹은 불이익을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주 협의회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병원 내 제도 개선에 있다고 강조한다.

병원 내 폭력에방관리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징계 등 최종 절차까지는 무려 13단계나 밟아야 한다.

내용도 ‘폭력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중지를 요청한다’ 등 수직적 조직문화가 퍼져있는 외국에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신속·적절 처벌을 촉구했다. 폐쇄적인 의사 사회에서 기인된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는 있어선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주 협의회장은 “얼마전 전남·전북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 등 폭력 사태는 비단 조선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폭력 문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제도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폭력 사태를 어느정도 방지하고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복잡하고 긴 절차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 이 문제가 잠잠해져선 안된다. 외국 내 폭력의 대물림 문제 해결 방법은 합당한 처벌 등을 포괄하는 제도 개선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병원에는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전공의 A씨를 향한 신경외과 소속 B교수의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 병원은 가·피해자를 분리하고 B교수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병원 측은 23일 김경중 병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 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할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병원장으로서 더 리속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희면 기자



###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 ‘드론 날려서 시설 위험도 날리자!’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22일 광주 북구종합체육관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드론)를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슬비기자



### 여수해경, 울춘면 해상 기름유출 긴급 방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여수시 울춘면 앞바다에서 기름이 유출돼 약 5시간에 걸쳐 긴급 방제작업을 펼쳤다”고 밝혔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해남교도소, 수용자 위한 문화(교화)공연 실시

해남교도소(소장 지경선)는 지난 23일, 한국예총연합회 해남지회가 주관하는 교정·교화사업의 일환인 수용자를 위한 문화(교화)공연을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구례소방,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안전문화 캠페인 펼쳐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최근 제76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범국민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중 밀집장소를 선정해 ‘소방차 길터주기 퍼레이드 및 안전문화 확산 길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순천 연향파출소, 보이스피싱 예방 주민참여 치안 활동

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수법도 점점 악랄하고 치밀하게 변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활동을 펼쳤다.

순천=김승호기자



### 담양경찰, ‘주민참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

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23일 주민참여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법집행을 강화하고자 지역사회에서 봉사 헌신하고 있는 외부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담양=박종영기자

## 단체티 가격 부풀려 1억대 뒷돈...기아차 노조 간부 재판행

### 입찰 업체 관계자 및 노조 관계자 11명은 불구속 기소

단체 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 업체와 짜고 값을 부풀린 뒤 뒷돈을 받은 기아차 노조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차 노조 총무실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단체복 제작·납품업체 관계자 6명과 범행을 도운 노조 관계자 5명 등 11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노조 단체복 티셔츠 2만8200장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업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를 낙찰받게 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찰 업체와 짜고 장당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400원에 납품하도록 해 차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노사협력실 직원 등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납품업체가 입찰비리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4100여만원과 A가 수수한 리베이트 1억4382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정보전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일부 조합원이 티셔츠 품질에 의문을 품고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당시 조합원은 티셔츠의 재질이 상대적으로 값싼 나이론 86%, 폴리우레탄 14% 합성 소재인데다, 라벨이 의류 업체가 아닌 점 등을 들어 ‘재고 품을 구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유나기자



### 겨울 길목 부산 해운대 물놀이

26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서선욱기자

## 전교조 “졸속 유보통합·늘봄 학교 확대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추진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통과한 것과 관련, 전교조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졸속 강제 병합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5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졸속 유보통합 늘봄 저지 3차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나뉘어 있다. 만 0-2살은 어린이집이 교육과 보육을 모두 담당하지만 만 3-5살엔 유치원(교육)·어린이집(보육)으로 이원화돼 재정 지원과 교육 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여당은 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 내 사무를 ▲영유아보육 ▲학교교육 ▲평생교육으로 구분해 교육과 보육 업무를 모두 맡긴다는 구상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 없는 졸속 병합으로 보육과 교육의 질이 동시에 저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유아의 발달에 맞는 상향화 모델인 3-5세 유아교육기관을 확립하고 0-2 영아에 대해서도 세심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29%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교육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OECD 국가 중 성공적으로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나라들은 공립 비율이 80%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추진단 해체 및 추진단장 사퇴 ▲5세 의무교육 시행 ▲유아 특수학급 확보 ▲교원 특별 양성체제 반대 ▲늘봄 비교과 교사 배치 철회 등도 함께 요구했다.

서선욱기자